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박봉주 총리, 연일 경제현장 시찰(3/2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박 총리가 리모델링 중인 평양 중앙동물원을 방문, 신축 중인 건축물과 중·개축 중인 여러 시설을 돌아보고 공사와 자재 확보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전함.
 - 또 관계자 협의회를 열어 종합적인 자연박물관 건설, 동물 종 증대, 사료 보장, 수의 방역체계 확립, 녹화사업을 통한 주위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함.

- **北, 자력갱생 연일 강조..."의존심에 중지부 찍어야"(3/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연길폭탄 정신을 마음속에 안고 살자'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연길폭탄 정신'과 '자력갱생 정신'은 "조선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라며 "의존심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오늘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초소들은 연길폭탄 정신을 뼈에 사무치게 간직한 참된 혁명가, 전세대들이 소중히 품고 달려오던 자력갱생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북한의 존엄과 위력을 과시할 애국자들을 부르고 있다고 역설함.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 총리), 중앙동물원 개건현장 현지요해(3.24, 중앙통신)
 - 김일성의 "백두의 혁명정신(총실성의 정신, 자력갱생·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백전불굴의 투쟁정신)은 조선혁명의 고귀한 재부"라며 이는 '절대로 변할 수 없으며,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해야 할 혁명정신'이라고 역설(3.25,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에 선물(컴퓨터·료전기재 등) 전달 모임, 3.25 한광복(黨 부장)·김진하(평양시 黨 비서) 등 참가한 가운데 각각 진행(3.25, 중앙통신)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창립 65주년 기념대회, 3.24 평양에서 개최 및 '사업문제 토의 및 수정된 단체규약 심의·승인과 지도기관 성원들 새로 선거' 등 진행(3.25,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 현대화에 이바지한 내각 사무국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3.26, 중앙방송)



- 박봉주 내각 총리, 위성과학자거리 건설정형 현지 요해(3.28,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발전풍부화 업적' 칭송 및 '김정은에 의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21세기를 대표하고 향도하는 영생불멸의 혁명사상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3.28, 중앙통신·노동신문)
- '오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김정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절대적 진리성과 변혁적 위력이 뚜렷이 과시되고 있다'며 '대를 이어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것은 당과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더없는 행운'이라고 주장(3.30, 중앙통신·노동신문)
- 전국 「직맹」 선전일꾼회의, 3월 30일 현상주(「직총」 중앙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3.30, 중앙통신)

나. 경제

- **北, 에너지난 극복 '과학기술 성과' 잇달아 소개(3/24, 조선중앙방송)**
 - 22일자 조선신보는 북한 국가과학원 연구진이 개발한 '생물질압착연료'가 평양의 공장 등에 도입돼 석탄 절약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신문은 생물질압착연료가 톱밥 같은 '농업 및 임업 부산물'로 만들어졌으며 "500kg의 생물질압착연료는 1t의 석탄과 맞먹는다"고 설명함.
 - 또 평양기계대학이 자동차의 출발과 도착 지점을 있는 최단 경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이를 도입한 운수기관들이 연료를 5~10% 절약했다고 소개함.
- **北, 짐바브웨 무기베 동상 500만달러에 제작키로(3/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장기 집권자인 로버트 무기베 대통령의 동상을 제작해주는 대가로 500만 달러(약 54억 원)를 받기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짐바브웨 매체를 인용해 25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북한 만수대창작사는 무기베 대통령의 90세 생일을 기념해 10m 높이의 무기베 대통령 대형 동상과 이보다 작은 동상을 제작하기로 짐바브웨와 계약함.
- **英단체, 北 작년 수재민에 3억원 규모 구호물품 지원(3/25, 조선중앙방송)**
 - 영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수재민들에게 30만 달러(약 3억2천만원) 규모의 구호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영국 민간단체 '웰터박스'는 지난해 여름 홍수 피해를 본 북한 수재민 1천200명에게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천막과 담요, 물통 등 생필품이 포함된 구호상자 448개를 내달 분배할 계획이라고 RFA는 전함.



- RFA는 또 북한에서 농업 지원사업을 벌이는 유럽 농업연구기관 유기농 연구소(FIBL)의 독일 사무소가 오는 8월부터 평양 인근에 암소 사육 시설을 세워 축산 관련 교육과 기술 지원을 시작한다고 전함

● "스위스, 올해 대북지원 예산 86억원 책정"(3/26, 미국의소리(VOA); 연합뉴스)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이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800만 달러(약 86억원)를 책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토머스 휘슬러 SDC 평양사무소장은 이날 VOA에 이 같이 밝히고 이 가운데 380만 달러(약 41억원)는 600t의 분유 지원에 투입했으며, 나머지 420만 달러(약 45억원)는 북한에 수질개선 기술과 산림농법을 전수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설명함.
-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스위스 정부가 보낸 분유 400t이 지난 3일 남포항에 도착했으며, 이 분유는 230만 달러(약 25억원) 상당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이 운영하는 북한 내 영양과자 공장과 혼합가공식품 공장에 보내져 영양식품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타타르스탄과 원유·가스 탐사 협력"(3/26, 러시아의소리)

- 북한이 원유와 가스 매장지를 탐사하는 데 러시아 연방의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이 26일 전함.
- 이 방송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루스탐 민니하노프 대통령이 지난 21~22일 북한을 방문했을 때 양국이 이같이 결정했으며, "북한은 원유, 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매장지를 탐사한 경험이 있다"며 "타타르스탄 전문가들의 경험이 북한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설명함.
- 러시아의소리 방송은 또 타타르스탄과 북한이 농기계 예비부품 생산 및 공급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함.

● 북한, 중국 건설업체 해외 현장에 근로자 송출(3/27, 중원경제망(中原經濟網))

- 외화벌이를 위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노무인력을 송출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 국영기업의 아프리카 건설 현장에도 근로자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중국의 경제 전문 포털사이트인 중원경제망(中原經濟網)이 27일 보도함.
- 중원경제망에 따르면 북한 건설총국 산하 청건무역회사는 최근 중국철도총공사 산하 종합건설업체인 중국철도건설17국집단건축공사와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함.



- **농업증산 나선 北, 연초부터 중국산 비료 대량 수입(3/28, 연합뉴스)**
 - 올해 농업 증산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비료 확보에 나선 북한이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중국산 비료를 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28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비료 1만3천769t을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1천64t)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뉴스는 전함.
 - 북한은 지난 1월에도 중국산 비료를 3만5천113t이나 수입하는 등 예년과는 달리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비료를 사들이고 있으며, 올해 1~2월 북한의 중국산 비료 수입량은 모두 4만8천882t에 달하지만 전년 동기에는 1천66t밖에 안됐으며 2012년 1~2월에도 6천490t에 불과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노동신문, 농촌 말단 생산단위 책임자 역할 강조(3/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봄 농사철을 맞아 농촌의 말단 생산단위 책임자인 분조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포전담당제'를 비롯한 분조 관리를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독려함.
 - 신문은 28일 1면에 실은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자기 임무에 무한히 충실하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모든 분조장은 분조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분조장의 역할에 따라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좌우된다"고 역설함.
 - 사설은 김 제1위원장이 올해의 첫 대회로 분조장대회를 소집한 것은 분조장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며 "영도자의 사랑과 믿음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는 것이 분조장들의 본분이고 도리"라고 주장함.

- **FAO "北 곡물 생산량 증가 추세...식량부족 개선"(3/29, 자유아시아방송(RFA))**
 - 3월 22일부터 나흘간 북한을 방문한 고누마 히로유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는 지난 26일 태국 방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작황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연재해의 변수가 있으나 올해 농산물 생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고누마 대표는 작황 증가로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기 위한 곡물 수입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하면서, 북한이 2009~2010년에는 80만t의 곡물을 수입해야 했지만 2013~2014년에는 식량 부족분이 34만t에 불과하다고 설명함.
 - 지난해 쌀 수확량이 11% 증가했고, 옥수수과 밀, 콩 등 전체 곡물 생산량도 4% 늘었다며 병충해에 강한 기능성 쌀 종자 개발과 비료 수급 개선을 증가이유로 설명함.



- **북-러, 러 기업 개성공단 진출 논의하기로(3/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러시아가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극동개발부를 인용해 29일 보도함.
 -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4박5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장관이 방북 기간 북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힘.
 - 지난 24일 평양에 도착한 갈루쉬카 장관은 26일 박봉주 내각 총리를 만난 데 이어 리룡남 무역상과 양국 간 무역, 경제, 과학기술 협조에 관한 회담록에 조인함.
 - 극동개발부는 또 양국이 경제·무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2020년에는 교역액 10억 달러(약 1조 690억 원)를 달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무역에서 러시아 루블화를 대금 결제 통화로 사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임.
 - RFA는 이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가스관 건설사업이 양국의 공동 관심사라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밖에 북한에 진출한 러시아 기업을 위한 북한 내 사업 환경 개선, 러시아 대북 투자자 법적 보호 문제, 러시아 기업인의 북한 방문 시 복수비자 발급 문제도 논의함.

- **"작년 러시아 對北 수출품목 1위는 지브크레인"(3/30, 연합뉴스)**
 - 30일 코트라가 발행하는 '북한통상정보'에 따르면 2013년 러시아의 대북(對北) 수출품 가운데 금액으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지브크레인'으로 2천115만8천 달러(약 226억원)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는 러시아가 작년에 북한에 수출한 전체 금액 9천651만2천 달러(약 1천31억원)의 21.9%를 차지한다고 뉴스는 전함.
 - 코트라는 "러시아의 대북 수출에서 지난해 지브크레인과 소방차, 궤도용 침목이 급증한 것은 나진~하산 철도 연결과 나진항 건설 등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함.

■ 기타 (대내 경제)

- 양강도 임업관리국에서 3.24 현재 1/4분기 산지 통나무 생산계획 104% 초과 수행 및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발전설비·생산공정 현대화 공정 소개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 주력 등 경제 성과 보도(3.25,평양방송·중앙방송)
- 조선노동당 경제부문 일꾼참관단(단장 : 리호선 당중앙위 부부장), 3월 27일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3.27,중앙통신·평양방송)



다. 군사

- **北, 한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노동미사일 2발 발사(3/26,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이 평양 북방 속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오전 2시35분과 45분에 탄도미사일 1발씩을 발사했다"고 밝힘.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새벽 2시35분과 2시42분에 평양 북방 속천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1발, 총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는 650km 내외를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힘.
 -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5일과 2009년 7월4일에 이어 3번째로 5년 가까이 만의 발사라고 뉴스는 전함.
 - 또한 외교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위반이라면서 "정부는 동맹국과 우방국, 안보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라. 사회·문화

- **평양에 부는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 '열풍'(3/25, 조선중앙방송)**
 - 24일 공연 첫날 5천석 규모의 4·25문화회관이 초만원을 이뤘다고 보도한 데 이어 25일에는 평양을 달구는 공연 관람 열기를 전함.
 - 신문은 25일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 열풍으로 수도 평양이 흥성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예술공연국으로는 매일같이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과 관련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라며 "매 지구보급소 주변은 관람표를 사러 오는 손님들로 이른 새벽부터 흥성이다"라고 소개함.
- **北, 마식령스키장 건설 공로자에 대거 표창(3/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공을 세운 군인과 일꾼, 근로자를 표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밝힘.
 - 임종식과 윤학용에게 김일성훈장이, 김윤하에게 김정일훈장이 각각 수여됐으며 박승원 상장 등 6명은 노력영웅 칭호와 금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받음.
 - 또 14명의 건설 관계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과 공훈자동차운전사·공훈설계가·공훈기술자·공훈건설자 칭호를 표창했으며, 이밖에 국기훈장 제1급을 43명에게, 노력훈장을 24명에게 각각 수여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함.



- "北, 1월 중순 평양 외곽서 구제역 추가 발병 통보"(3/26,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평양 외곽에서 지난 1월 중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를 인용해 26일 보도함.
 - OIE는 북한이 지난 1월 16일 평양시 순안구역에서 O형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이달 24일 리경근 농업성 수의방역국장 명의로 통보해왔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감염 의심 돼지들을 격리하고 발병 지역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VOA가 전함.

- 北 "올해 '결핵투쟁' 새 이정표 마련"(3/26, 조선신보)
 - 북한 보건성 박정민 국장은 지난 24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린 '세계 결핵의 날' 행사에서 올해 "결핵투쟁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26일 전함.
 - 조선신보는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북한에서 벌어진 예방활동을 소개하면서 "2015년까지 국내에서 결핵이 더는 중요한 보건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결핵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결정적으로 낮추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고 있다는 조선의학협회 결핵부문위원회 리정찬 위원장의 발언도 전함.

- WHO, 北에 최첨단 결핵진단시스템 지방으로 확대 보급(3/27, 미국의소리(VOA))
 -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북한의 지방까지 최첨단 결핵진단 장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7일 보도함.
 - WHO는 최근 공개한 '2014 결핵 보고서'에서 결핵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인 '진엑스퍼트'를 지난해 평양 소재 국립결핵표준연구소에 처음 설치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힘.

- FAO "北 구제역 피해 확산···DMZ 근처 소도 감염"(3/28,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서 구제역이 빠르게 퍼져 북한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근처의 소들까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28일 보도함.
 - FAO는 지난 26일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 강원도의 DMZ와 가까운 협동농장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소 4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힘.
 - FAO는 북한에서 돼지 구제역 피해가 여전히 확산 중이라며 향후 북한에 구제역 검사와 예방 방안을 지원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기상수문국, 2월 10일경부터 현재까지 40여 일간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의 대부분 지방과 평안북도, 강원도, 자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방에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거나 매우 적은 비가 내려 가물고 있다'며 평양시 등 대부분 지역의 '가뭄' 보도(3.24, 중앙방송)
- 산림과학원에서 '혼성림 조성방법과 무동력 안개분무장치에 의한 나무모 생산방법 도입 등으로 산림자원을 늘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며 '산림과학 기술성과'를 선전(3.24, 중앙통신)
- 北, 청천강 계단식발전소들에 물고기길(魚道)을 조성(3.26, 중앙통신)
- 北 교육위원회 등 전국 각지 학교·유치원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새 학년도 준비사업 진행(3.27, 중앙방송)
- '태양절(4.15, 김일성 생일)' 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4월 중순 ~ 5월 중순까지 개최 예정(3.30, 중앙방송)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한미 '쌍용훈련' 맹비난... "전형적 대북공격용"(3/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사나운 발톱을 드러낸 침략의 독수리'란 제목의 논평에서 쌍용훈련에 미 해병대 제3원정여단 등이 참가한다며 이 부대가 "이라크전쟁에서 악명을 떨쳤고 유사 시 조선반도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무력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함.
 - 신문은 쌍용훈련이 "전형적인 공격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무슨 '방어적성 격의 훈련'이니, '도발대비'니 하는 뻔뻔스러운 수작들을 내뱉으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북침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고 비난함.
- 조선신보 "우크라 사태, 美 사주로 발생"(3/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4일 시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과 그를 충실히 따르는 EU(유럽연합)의 교활성과 범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이 반정부 시위로 붕괴한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반로(반러시아), 친서방, 극우민족주의 세력'을 사주해 일으킨 '쿠데타'라고 밝힘.
 - 신문은 "서방 언론들은 한결같이 우크라이나를 선(정의), 러시아를 악



(부정의)으로 묘사"하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함.

- **러' 극동개발부 장관 일행 방북...경제협력 논의 예정(3/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북러 무역·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인 갈루쉬카 장관과 일행이 24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함.
 - 한편 김영일 노동당 비서가 24일 방북 중인 카즈백 타이세프 러시아국 가회의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는 러시아 공산당 주최로 김일성 주석의 첫 소련 공식 방문 65주년 기념사진 전시회 '친선의 역사'가 열렸으며, 김기남 당 비서와 강석주 내각 부총리, 타이세프 부위원장을 비롯한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함.

- **北 신문 "美, 대세에 따라 대북 적대정책 포기해야"(3/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대세에 부합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공화국은 이미 핵보유국으로 됐다"라며 미국이 "낡아빠진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고 현실적인 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25일 '외세추종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는 미국이 "북남관계 문제에 주제넘게 간섭하면서 남조선 당국을 동족대결로 적극 떠밀고 있다"고 비난함.

- **北통신 "미국의 인권소동 파탄 면치 못해"(3/26,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발표한 '보도'에서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그 무슨 '조선인권조사위원회'가 '조선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여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들며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함.
 - 이어 "이것은 명백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현의 새로운 침략방식으로서의 '인권' 소동이며 현대판 전쟁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함.

- **北 신문 "美的 대북 인권공세, 반미감정만 격화시켜"(3/27일,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공세는 파탄을 면치 못한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선거문제를 걸고든 것은 전례 없는 일로서 그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함.
 - 신문은 "최근년간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선거문제를 거들며 선거가 공정치 못하다고 하면서 반정부세력을 부추겨 혼란을 조성하고 '인권 옹호'의 간판 밑에 노골적인 무력침공까지 감행하고 있다"



고 주장함.

- **北-中, 올해 북한 내 중국군 묘역 전면 개보수(3/28, 신화통신)**
 - 북한과 중국이 올해 공동으로 북한 각지의 중국군 전사자 묘역에 대한 전면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함.
 - 중국 당국은 북한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난 2012년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개보수했고 지난해 개성과 안주의 중국군 묘역에 대해서도 측량과 설계를 진행해 개보수 방안을 마련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日 조선총련 건물 매각허가 또 비난(3/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민주법률기협회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이번 결정은 일본 당국의 '배후조종'하에 이뤄진 "불법무도한 결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 협회는 조선총련 중앙본부는 북일 간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외교대표부 역할을 해왔으며 "일본 당국이 사법기관들을 부추겨 끝끝내 총련중앙회관을 강탈하려한다면 우리도 선군조선의 법으로, 정의를 사랑하고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천만군민의 판결로 무자비하고도 단호한 징벌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함.

- **북일, 1년4개월만에 정부 간 공식 협상 시작(3/30, 연합뉴스)**
 - 북일 간 국장급 협상은 30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개최됐으며 북한 측에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일본 측에서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함.
 - 일본은 회담에서 자국민 납북자 송환과 납치 문제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며, 북한은 2006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이 시행 중인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일(당중앙위 비서), 3월 24일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단장 : 카즈백 타이세프 러시아 국가회의 경제정책위 부위원장)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3.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노동당과 러시아연방 공산당 사이 '협조에 관한 의정서', 3월 24일 평양에서 조인(3.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인식에 김영일(당중앙위 비서), 김성남(부부장),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 참가
- 노동당 중앙위, 3월 24일 평양고려호텔에서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을 위해 연회 마련(3.24, 중앙통신)
 - 연회에서 김영일(당중앙위 비서/연설)은 앞으로도 러시아연방 공산당과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우의를 두텁게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김일성의 첫 소련 공식방문 65주년과 1984년 소련방문 30주년을 즈음한 평양사진전시회 '친선의 역사'가 러시아연방 공산당 주최로 3월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3.24, 중앙통신)
 - 개막식에 김기남(당중앙위 비서/축하연설), 강석주(내각 부총리),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 주북 러시아 대사 참가
- 한미 연합상륙훈련 '쌍용훈련'과 연합공중전투훈련 '맥스언더' 훈련에 대해 "전형적인 공격훈련"이라고 비난하며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도발자는 미국'이라고 주장(3.24, 평양방송·노동신문)
- 北-러 間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러시아측 위원장(알렉산드르 갈루쉬카 원동발전상)과 일행, 3월 24일 北-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5주년을 즈음하여 평양 도착(3.24, 중앙통신·중앙방송)
- 訪北 러시아 원동발전상 일행, 3.25 해방탑에 헌화(오룡철 무역성 부상 및 駐北 러시아 대사 등 참가) 및 금수산태양궁전 참배(3.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3월 26일 러시아 원동발전상 일행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3.26,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日 연안전투함 공동개발계획 발표 관련 '일본의 군국화와 재침 준비책동에 부채질하는 무모한 처사이며, 아·태지역을 군사적으로 제패하기 위한 흉계의 한 고리'라고 재차 비난하며 '분별있게 처신하라'고 주장(3.26, 평양방송)
-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北-러시아 친선협회, 3월 27일 北-러 사이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5주년을 즈음하여 옥류관에서 연회 마련(3.27,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국통일연구원, '미국은 남북대화와 평화파괴의 원흉이며 남북관계 파국과 한반도 긴장 격화의 장본인'이라며 '미국의 범죄적 정체를 규탄'하는 비망록 발표(3.27, 중앙통신·중앙방송)



- 中 지린성기록보관소의 '위안부' 강제동원 문건 공개를 연합뉴스 인용 보도하며 '일본의 성노예 범죄가 국가적 조치에 의해 감행되었다'고 비난(3.27, 중앙통신)
- 北 「외무성」 대변인 중앙통신 문답(3.28), 美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합동군사연습 강화' 등 발언(3.25,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석상)에 대해 "앞으로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3.28,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3.28),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총련」 중앙회관 토지·건물 매각허가 결정에 대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생존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우리(北)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규탄(3.28,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전략검토 보고서(北 미사일·핵무기, 한반도와 동북아 위협 등) 지속 비난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위협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장(3.28,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訪北 러시아연방 공산당 연해주위원회 대표단, 3월 29일 만수대언덕 김父子 동상을 참배하고 헌화(3.29,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은 세계적인 핵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이며, '핵없는 세상'을 들고 다니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핵 제패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는 한 자체의 핵 억제력을 계속 확대 강화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3.29, 중앙통신)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3.30), 유엔 인권이사회의 '北 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진정 인권을 논한다면 미국·일본·EU나라의 반인륜 범죄부터 국제적인 형사재판기관에 회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3.31, 중앙통신)

나. 북핵

- 北, '국방위 성명' 유엔안보리 공식문건으로 배포(3/2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방위원회 성명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외에 천명한다'가 2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4/194호로 배포됐다"라고 전함.
 - 국방위는 해당 성명에서 "지금처럼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계속되고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우리의 추가적인 조치들도 연속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며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함.
- 최선희 北 외무성 부국장 방중...美와 접촉가능성(3/25, 연합뉴스)
 - 북한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25일 중국 베이



이징(北京)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 부국장의 방중 목적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외무성 성명 "새로운 형태 핵실험도 배제 안해"(3/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은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난하면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경계망동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함.

- 외무성 성명은 "조선반도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파괴적인 사태가 초래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남한 軍 대북전단 살포...남북관계 파국으로 몰아"(3/26,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26일 우리 군이 서해 5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빠라)을 살포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남북관계가 '파국적 후과(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함.

- 조평통 서기국은 26일 '보도'를 통해 남한 군이 지난 24일 서해 5도 일대에서 "총포를 쏘아대고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빠리들을 살포하는 극악한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이는 "북남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비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천안함 사건, 남북관계 장애물로 남겨뒀선 안 돼"(3/26,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위원회 김영단 비망록'에서 천안함 사건은 "극도의 동족 대결광들이 고안해낸 민족사상 초유의 특대형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며 "천안호(천안함) 사건을 더이상 북남관계 개선을 막아나서는 인위적인 장애물로 남겨뒀서도 안되며 긴장완화의 걸림돌로 방치해놓아도 안된다"고 밝힘.

- 이어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바란다면 이명박 일당이 천안호 사건과 관련해 취했던 5·24 대북조치와 같은 모든 동족대결 조치들을 대범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함.

● **北** 조평통, 차대통령 복핵 발언 실명으로 원색 비난(3/27, 조선중앙방송)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발언은 "심히 못된 망발"이라면서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분별과 이성을 찾고 인사를 삼가는 버릇부터 붙여야 한다"고 주장함.

- 조평통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위험을 경고하고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지적한 데 대해 "삼척동자도 양천대소할 세계적인 특종조소거리", "무지와 무식의 표현", "방구석에서 횡설수설 하던 아낙네의 근성" 등 원색적인 말로 비난함.
- 대변인은 "박근혜는 이번에 우리의 핵을 터무니없이 걸고두고 병진노선 까지 시비질함으로써 비방중상을 중지할 데 대한 북남 고위급 접촉 합의를 그 자신이 난폭하게 위반했다"며 "그러고도 그 무슨 '신뢰'니 '진정성'이니 하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라고 반문함.

● 軍, 나포했던 北어선 오늘 새벽 北으로 송환(3/28, 연합뉴스)

- 백령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나포됐던 북한 어선 1척이 28일 새벽 2시경 북측으로 송환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해당 북한 어선은 27일 오후 5시26분경 백령도 동방 인근 서해 NLL을 1노티컬마일(1.8km) 월선한 뒤 우리 해군의 퇴거조치에 불응해 저녁 8시경 나포됐었다고 뉴스는 전함.
- 합참의 한 관계자는 "북한 선원에 대한 조사결과 엔진고장으로 표류한 것으로 귀순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새벽 북한 어선을 NLL 선상으로 예인해 북측에 송환했다"고 밝힘.

● 북한군 총참모부 "어선 나포사건 용서하지 않을 것"(3/28,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총참모부는 28일 우리 군이 백령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어선을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이번에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이 우리 어선을 강압적으로 나포하면서 놀아댄 무지막지한 강패행위와 우리 인원들에게 가한 비인간적이고 야수적인 만행에 대해서는 절대로 스쳐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北 '나포 선원' 기자회견... "남해군, 폭행·귀순 강요"(3/29, 평양방송)

-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한국 해군에 나포됐다가 송환된 선원들을 기자회견에 내세워 남측이 이들을 강제로 납치해 폭행하고 귀순을 강요했다고 평양방송을 통해 주장함.
- 해당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3명은 해군이 나포 과정에서 "쇠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선장, 기관장을 마구 구둑발로 밟고 쓰러진 다음에는 목을 누르고 팔다리를 꺾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잔인한 행동



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함.

- 또 남측에서 귀순을 권했다면서 이번 나포는 "우리가 스스로 남조선으로 찾아오게 됐다"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며 그로 해서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하자는 것"이라고 말함.

● **北, 전단 살포 또 비난...南 합의이행 지켜볼 것(3/29, 조선중앙통신)**

- 북측대표단 대변인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한다는 지난달 14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엄중한 배족적인 반역행위"라고 비난함.
- 대변인은 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공공연한 전쟁도발행위"라며 "빠라 살포는 가릴 수 없는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으로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것이 심리전"이라고 지적함.
- 이어 정부가 군의 대북 전단 살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해 전단 살포시 최전방 부대의 즉시 사격태세 유지조치와 탈북자의 전단살포 비호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의 위임까지 거들면서 다짐했던 맹약이 결국 당국 비호 하의 빠라 살포와 비방중상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연막에 불과했다"고 주장함.

● **北 신문 "남북관계 운명 南 행동에 달렸다"(3/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개인 필명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이 경고를 무시하고 악의적인 비방·중상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을 면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북남관계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경고함.
- 신문은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남조선 집권자'라고 지칭하면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지난달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를 뒤엎었다며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에 대해 똑똑히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체면 없이 국제회의 연단에 나서서 우리를 마구 시비질하며 온갖 잡소리를 늘어놓았다"라고 비난함.

● **北, '드레스덴 선언' 후에도 朴 대통령 실명 비난(3/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야만행위'라는 제목으로 군대와 적십자회, 직업총동맹 간부와 주민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최근 우리 군이 북한 어선을 나포한 사건을 거칠게 비난함.
- 특히 인민군 군관 김경호는 "지금 박근혜는 유럽 나라들을 돌아치며 그 무슨 '통일'이니, '공동번영'이니, '교류'니 하는 낮간지러운 수작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고 최근 박 대통령의 네덜란드·독일 방문을 헐뜯음.



나. 경제·사회·문화

● 수출입銀, 北 조선무역은행에 경공업차관 상환촉구(3/25, 연합뉴스)

- 한국수출입은행은 25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대북 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액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수은은 2007년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조선무역은행에 경공업차관 형태로 제공했으며, 그 해 조선무역은행은 차관액의 3%(40만달러)를 아연괴로 현물 상환했고 나머지 97%는 금리 연 1%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갚게 돼 있음.
- 수은 관계자는 "올해 3월 24일 첫 상환일이 도래해 지난달 27일 조선무역은행 측에 팩스를 보냈으나 지금까지 응답이 없다"고 설명함.

● 남북 민간단체, '군 위안부 문제 해결' 한목소리(3/29, 연합뉴스)

- 남북한과 해외의 여성단체 대표들은 29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를 열고 군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 일제 식민지 범죄와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을 성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거 일제 식민지 범죄', '일본군 성노예 범죄',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동향'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남북한과 해외여성대표가 각각 발표를 진행한 뒤 토론회 말미에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남)

-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국의 대조선 적 대시정책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주장(3.24, 중앙통신·노동신문)

한일협정 반대운동('64.3.24) 50주년을 맞아 '이 투쟁은 조선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재침기도를 물리치고 민족해방과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항거였다'고 주장(3.24, 평양방송)
北 「국방위원회」 검열단, 3.26 '北 천안함 폭침' 4주기 관련 '同 사건은 동족대결광들이 고안해낸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기존 주장 반박 및 책임 회피 '비망록' 발표(3.26, 중앙통신·중앙방송)

"외세와의 공조는 반통일의 길, 북침전쟁의 길"이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및 그와의 공조를 반대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의 민족공조 실현' 선동(3.25, 중앙통신·노동신문)

韓美 해병대의 '지휘소연습(3.15-23, 포항 등)' 연합뉴스 인용 보도 및 "미제가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3.25, 중앙통신·중앙방송)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3.26),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네델란드)에서 대통령의 북 핵 발언 관련 '남북고위급접촉합의를 위반했다'며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분별과 이성을 찾고 언사를 삼가하는 버릇부터 붙여야 한다'고 실명거론 비난 및 "행보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3.27, 중앙통신·중앙방송)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3.26), 서해 5도(島) 일대에서 대북 전단지 살포 관련 '우리(北)의 체제를 헐뜯는 특대형 범죄를 감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南 당국은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3.26, 중앙통신·중앙방송)

「직총」 대변인 담화(3.27), 서해 5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지 살포' 관련 "우리(北)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대한 극악한 도발행위"이며 '괴뢰패당의 계획적인 반공화국 대결난동'이라고 비난 및 '南 당국의 비방중상 중지'를 주장(3.27, 중앙통신)

정부의 '천안함 폭침' 관련 발언(北 소행)과 서해 5도 '대북 전단지 살포'를 거론하며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는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다'고 위협(3.27, 중앙통신)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온 겨레의 우리민족끼리 이념밑에 反美 자주화 투쟁 전개' 선동(3.28, 평양방송)

우리 해군의 'NLL 월선 北 어선 나포 및 송환'에 대해 "동족압살 기도의 집중적 발로"라며 "이번 사건을 절대로 스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및 '南 당국의 사죄와 관련자들 처벌'을 주장(3.30, 중앙통신)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中, 헤이그 '북핵 조율'... '총론 동의·각론 이견'(3/25, 연합뉴스)**
 - 24일(이하 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장기 교착된 북핵 대화 흐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되고 있음.
 - 선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의견교환이라도 한·미·중 3국 정상외 북핵 문제에 대한 공통인식을 확인하고 공동 노력을 꾀한다는 '컨센서스'를 형성한 것은 새로운 정세변화의 계기점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다만 큰 틀에서 볼 때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론을 확인하면서도 북핵 대화의 기본 틀인 6자회담 재개의 방법론을 도출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됨.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사전조치 이행'에, 시 주석은 '6자회담 재개'에 방점을 두고 있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대화재개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있음.

- **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 발사 규탄" 엄중 경고(3/2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비공개로 열린 안보리 15개 이사국 회의를 마친 뒤 안보리 의장 명의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한다"고 '구두 언론성명'을 통해 엄중 경고했음.
 -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향후 북한의 태도와 자세 변화 등을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음.
 -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사국들의 우려와 성명 발표에 반대하지 않았으나 구두 언론 성명은 안보리의 공식 결의에 포함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여서 중국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풀이됨.
 - 따라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 확대와 같은 추가 제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임.



나. 미·북 관계

● 美 "北단거리 로켓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3/25, 연합뉴스)

-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로켓 수신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데 대해 "내가 아는 한 단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874호, 2007호, 209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사정포는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프로그(FROG·무유도 로켓) 계열로 안보리 결의 대상에 적용되지 않음.
- 한편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관련국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主한美사령관 "김정은 도발언사 잦아든건 中압박때문"(3/26, 연합뉴스)

- 커티스 스키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태평양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김정은의 도발적 언사 수준이 낮아진 것은 중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스키파로티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동참을 촉구했다.
- 북한 내부정세와 관련해 그는 "김정은이 분명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는 장성택 처형을 김정은 정권이 불안하다는 징후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정권 장악을 과시하려는 고도로 계획된 행동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美 '한반도통' 자누지 "북핵보다 인권 먼저 생각해야"(3/28, 연합뉴스)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문제보다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 자누지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다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행위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그는 "한·미·일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이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일의 대화와 협력은 중요하다"면서 최근 이들 3국 정상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北-美,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 현장서 '기싸움'(3/29, 연합뉴스)**
 - 북한을 국제 사법 메커니즘에 회부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 결의안을 놓고 2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북한과 상대국 간에 '기싸움'이 연출됐음.
 -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장에서 플라 슈리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의 발언에 세 차례 끼어들면서 다른 나라를 비판하기보다 자국을 향한 의혹에 답변하라고 요구했으나, 서 대사는 "우리 말에 '자기 일이나 신경쓰라'는 말이 있다"고 발언했음.
 - 한편, 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의 바탕이 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읽었느냐는 로이터 통신의 질문에는 문서를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듯한 손동작을 하며 '다 지난 일(passed away)'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 중북 관계

- **최선희 北 외무성 부국장 방중...美와 접촉가능성(3/26, 연합뉴스)**
 - 북한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25일 오전 북한 고려항공 편으로 일행 2~3명과 함께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북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
 - 최 부국장의 방중 목적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과 6자 회담 재개 조건 등의 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 관측통은 "최 부국장이 조만간 베이징을 떠나 제3의 장소로 가서 미국 측과 접촉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 **중국, 北 노동미사일 발사에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3/26,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26일 새벽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고 밝혔음.
 - 이어 "우리는 현재 국면에서 관련 국가들이 국면을 완화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지역의 평화·안정을 함께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북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가 지역 긴장 국면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혔음.
 - 이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란 점에서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엄중 항의(3/26,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6일 새벽 북한이 동해 쪽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했음.

-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한미 양국 등과 공조해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향해 안전 확인에 철저함을 기할 것 등을 지시했으며,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도 경계감시와 정보수집을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음.
- 한편,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날 자민당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로 30~31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북일 정부간 공식 협상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 北 "일북회담서 군위안부 보상도 의제 돼야"(3/26, 연합뉴스)

-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0일 재개되는 일본과의 국장급 공식회담 의제로 일제 강점기 군 위안부 보상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음.
- 서 대사는 일본이 주의제로 생각하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며 그에 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음.
- 그러나 서대사는 "몇몇 이슈들을 두고 다른 의견들이 있으며 일부는 긍정적이고 일부는 부정적"이라면서 "이번 회담이 북일 양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양쪽 국민에게 좋을 것이며 그것이 이런 대화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음.

● 일본, 납치문제 진전시 대북제재 해제 시사(3/28, 연합뉴스)

- 후루야 납치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있고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도 있다"고 강조, 30~31일의 북일 정부간 공식 협상을 앞두고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음.
- 앞서 후루야 담당상은 18일 기자들에게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재 해제는커녕 북한에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음.
- 그는 다만 이번 북일 정부 협상에서 납치문제의 재조사를 요구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조치를 해제할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음.
- 한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협상에서 "납치, 핵, 미사일 등의 모든 현안을 의제로 다루겠다"고 말했음.

마. 기타

● 정부 "北, 긴장고조 도발적 언행 중단해야"(3/25, 연합뉴스)

- 정부는 25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계속하면 북한은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의 발언에 대해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라"고 비난했음.

-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9·19 공동성명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 또한 외교부 대변인은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문제 논의와 관련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도 대화 재개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 "韓美 대북억지 실패 우려...南北 무력충돌 위기 높다"(3/28, 연합뉴스)

- 미국의 대북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대북억지에 실패한다면:한반도 무력충돌 다시 생각하기'라는 정책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의 대북 억지가 실패하고 남·북한 간에 무력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음.
- 이 같은 한반도 위기 고조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공격능력 강화, 내부체제 불안에 따른 군사도발 가능성, 미국의 국방비 축소, 한·미 양국의 도발 준비태세 약화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게 크로닌 연구원의 분석임.
- 크로닌 연구원은 "3년 내에 북한이 전술핵을 배치할 것에 대비할 필요하고 있으며 전술핵 사용 억지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잠재적 급습 능력에 대비해 전술핵무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억지노력을 확대하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 미국신안보센터(CNAS)가 3년 내에 전술핵 무기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완성됐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밝힌바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팀스피리트 이후 최대 규모 상륙훈련 실시(3/28, KBS)

-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에서도 가장 두려워한다는 한미 해병대의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번 훈련은 1993년 팀스피리트 연습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 북한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임.
- 이번 훈련에는 미측에서 해병대 7천5백여 명과 해군 2천여 명, 우리측에서는 해병대 등 3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고, 지난해 4대만 참가했던 미 해병대의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는 이번에는 20여 대가 투입될 예정임.



- 이번 훈련 규모가 커진 것은 미 해병대가 한반도를 아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지역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나. 한중 관계

● 시진핑 "남북, 자주·평화적 통일실현 희망"(3/24,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남북 양측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실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시 주석은 "북한 핵 문제는 마구 뒤얽혀 복잡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책이 필요하다"면서 "각 당사자가 한반도의 형세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해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 남북 대화를 권유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데 사의를 표했다.
- 또한 박 대통령은 "한국은 양국 지도자 간 상호방문 강화, 한중 전략대화, 인문교류공동위원회 등을 잘 운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한중 FTA가 조속히 완성됨으로써 양국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뤄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중국 정부 "인민지원군 열사 귀환, 한국에 감사"(3/28,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중국군 유해 437구의 중국 송환에 대해 "우리는 이 협력이 반드시 양국 인민 사이의 우호적 감정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특히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시 주석이 네덜란드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군 유해송환과 관련해 한국 측이 도움을 준 데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 이어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기간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은 중국을 도와 지원군 열사 영구를 중국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고 제의했다"며 "양국의 유관 부문이 밀접한 소통을 거쳐 이 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다. 한일 관계

● "한일, 내달 중순 軍위안부 국장급협약"〈日신문〉(3/26,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한국 측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현지시간 25일 진행된 한미일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한 사실상의 전제 조건으로 일본에 군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회 창설을 제시했고, 양측은 4월 중순 개최를 목표로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미하게나마



생긴 한일관계 정상화의 동력을 한일 국장급 협의와, 뒤이은 오바마 대통령의 '중재외교' 등으로 살려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됨.

- 그러나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한국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는 일본 사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개최 자체를 넘어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지는 불투명함.

● "한일정상 첫 회담했지만 관계개선 불투명" <美日언론>(3/26, 연합뉴스)

- 일본과 미국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사이의 첫 공식회담이었던 한미일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세 나라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협력의지를 확인한 사실과 역사인식 문제를 다루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 교도통신은 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일본과 대립 중인 역사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것은 한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맡은 베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라고 해석했음.
- 요미우리 신문 등 여러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언론에 공개된 회담 초반부에 박 대통령에게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박 대통령이 눈을 맞추지 않는 등,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현재의 한일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평가했음.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음.

● 정부 "日 문부상 발언,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비판(3/27, 연합뉴스)

- 외교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고노 담화·무라야마 담화가 교과서 검정 기준에 따른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와 학상의 발언을 비판했음.
- 또한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가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망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다"고 밝혔음.
- 이어 조대변인은 일본 자민당이 한국과 중국의 반일에 대응하는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반일이 아니고 일본 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음.

● 日외교청서 "한일관계 곤란한 문제 있어" <교도>(3/28,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의 2014년도 외교청서 원안에 한일 관계와 관련, "곤란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이런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나 독도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



보도했음.

- 한일 양국 관계 회복에 관해서는 "끈기 있게 노력한다"는 작년도 외교청서의 내용보다 한층 강한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밖에도 통신은 일본 외교청서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 선박 등을 자주 진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라고 규정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라. 마중 관계

● 일본 관리 "中 센카쿠 태도, 러시아 크림병합과 유사"(3/25, 연합뉴스)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내각부 부(副)대신은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일본은 중국이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현 상황을 바꾸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크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과 거의 마찬가지로"라고 주장했다.
- 그는 또 센카쿠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기본으로 돌아가 상호 이익이 되는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니시무라 부대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 그룹에 속한 인물로,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정책 입안에 관여하고 있음.

● 중국, 美 대만관계법 재확인에 '발끈'(3/28, 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어떤 국가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도 반대하며 이런 입장은 단호하고도 명확한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의 이런 요구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만관계법 제정 35주년을 기념해 이 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지난 25일 채택한 뒤 나온 것임.
- 정연성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 간 신형 대국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킬 것도 강한 톤으로 요구했음.
-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맺고 있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미국 국내법 형태로 대만관계법을 제정, 중국의 반발에도 지속적으로 대만에 무기를 팔고 있음.

● "中, 장거리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연내 배치"(3/28, 연합뉴스)

- 중국 해군이 올 연말까지 최신형 핵잠수함에 사거리가 7천km가 넘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장착할 것이라고 영국의 군사 전문지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보도했음.
-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이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말한 것을 인용 중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60~70척 규모의 현대화된 잠수함 전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 리클리어 사령관은 특히 최신형 핵잠수함에 사거리가 4천 해리(7천500 km)인 장거리 미사일이 장착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를 통해 처음으로 신뢰할만한 잠수함 발사 핵 억제력을 올 연말 이전에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 마일 관계

● "미일, 내달 6일 국방장관회담 검토" <교도> (3/27,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7일 미국과 일본이 내달 6일 도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통신에 따르면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내달 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일본을 방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과 회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일본 측은 무기수출 금지 규정으로 작용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 무기 수출 및 공동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 전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바. 미·러 관계

● <우크라이나> "美, 크림사태로 러시아와 전쟁할 계획없어" (3/25, 연합뉴스)

- 24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 고위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경제, 정치적 수단을 통해 러시아에 영향을 주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크림 사태로 러시아와 군사 대결을 벌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미 정부 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일부 인사들이 서로 무력 응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 미국은 러시아와 전쟁 의사는 없지만 러시아 등에 대한 도청과 첩보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조치는 미국 정보기관이 러시아의 크림 합병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 美, 러 압박카드로 가스 사용?...LNG 수출 추가 허가 (3/25, 연합뉴스)

- 미국 에너지부는 24일(현지시간) '조던 코브 에너지 프로젝트'가 국내 생산 LNG를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수출하는 것을 조건부 승



인했다고 밝혔음.

- 최종 허가를 받으면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 들어서는 LNG 터미널을 통해 로키산맥·캐나다산 천연가스를 일본·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게 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 그러나 환경 검토와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 등 절차를 아직 거쳐야 하며 실제 수출이 시작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그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천연가스 수출을 강력히 규제해왔으나, 수입파쇄법 등 시추기술 혁신으로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장려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으며, 특히 서방과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미국도 천연가스 자원을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음.

사. 중일 관계

● 日 언론 "시진핑, 안중근 매개로 反日한중공조 시도"(3/25, 연합뉴스)

- 일본 언론 매체들은 25일 핵안보정상회의(24~25일)를 계기로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3자간 협력에 '틈'을 만들려는 중국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아사히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모두에 기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설을 직접 지시했다"고 운을 떼자 박 대통령이 "한중 우호협력관계의 좋은 상징"이라며 화답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한편, 홍콩의 명보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을 만난 이유는 3국 정상회담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 中 "아베 총리, 국제무대에서 중국 협담" 비난(3/28,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을 비난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그가 망명되게 국제무대에서 남의 이목을 현혹하고 중국을 헐뜯지만 국제사회를 속일 수는 없다"고 비난했음.
- 또 "우리는 일찍부터 이 일본 지도자가 한쪽으로는 중일관계 개선을 제의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협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며 "이번 발언은 다시 한번 그 같은 면목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콩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중국의 다오위다오를 흠쳐갔고 2년 전 일본이 현 상황을 깨트렸다는 점"이라며 주권과 영토보존에 대한 우리 결의는 결코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 중러 관계

- "푸틴, 중국에 S-400 미사일 판매 동의"〈VOA〉(3/29, 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8일(현지시간)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대와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첨단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중국에 판매하는 데 동의했다고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를 인용, 보도했음.
 - 중국이 외국으로선 처음으로 이 방공미사일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자국 영공을 방어하는 외에 센카쿠와 대만 공격에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중국은 수 년 전부터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 구매에 관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조라는 러시아 군부와 정보기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자 '우군 확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를 결정했다고 VOA는 분석했음.

자. 일러 관계

- 〈우크라이나〉 "일본, 외상 방러 보류...對러외교 조정"(3/26,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 선언을 계기로 대 러시아 외교전략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음.
 - 일본 정부는 내달 중 예정했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과 경제 관련 회담 등을 보류할 방침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 기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올가을로 잡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미뤄질 공산이 커졌음.
 -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만 해도 러시아와의 쿨링 4개 섬 반환 협상을 감안, 러시아 비판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이러한 변화는 내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미 일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며, 센카쿠열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하고 있는 입장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방관하다가는 비판을 살 수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됨.

차. 기타

- "일본 자민당, 한중 반일활동 대항 전담위원회 설치"(3/27,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일본 집권 자민당은 한국, 중국 등의 '반일 선전'에 대항할 수 있는 정보홍보 전략 구축을 위해 '국제정보검토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한다고 보도했음.
 - 한중 양국이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일본군 위안부 문



제를 놓고 일본 비판 캠페인을 강화하는 데 따른 잘못된 대일 인식이 세계에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일본 입장 홍보를 통해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 위원회는 한중 두나라가 미국에서 벌이는 선전활동을 조사하고, 미국 내에 이에 대항하는 일본 정부의 홍보 전략 거점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특히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중 양국의 로비 활동, 의원 외교, 시민운동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임.
- 자민당은 이와 함께 정부 전체의 홍보 활동을 총괄하는 새로운 조직과 해외 거점 설치, 민간활동 자금 지원 등도 검토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 한미일, 내달 17~18일 워싱턴서 '3자 안보토의'(3/28, 연합뉴스)

- 국방부는 28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부 고위급 관료들이 내달 17~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3자 안보토의'(DTT)를 연다고 밝혔다.
-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안보토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방안과 인도적 구조, 재난 구호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 회의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며,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 및 3국간 안보 협력 차원에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와 함께 국방 고위 실무자급 회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 "중국, 정찰기 전력 대폭 보강...10여 종 개발"(3/28, 연합뉴스)

-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군사 충돌 등에 대비해 최첨단 정찰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대만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 왕보는 중국 관영 환구망 등을 인용해 중국이 자체 개발한 최신형 전자정찰기 '가오신 4호'의 비행 장면이 공개됐다고 전하며, 가오신 4호는 미세한 전자 신호까지 잡아낼 수 있고, 이는 기존 정찰기보다 전자정보 수집 능력이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대만 언론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과 미·일간 군사적 긴장이 수시로 고조돼 상대 측의 동향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중국이 첨단 정찰기 성격의 군용기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차대통령, 유럽순방 결산...통일협력·북핵공조 성과(3/28,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한중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한 주변 강대국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 박 대통령은 이처럼 중국과 미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북핵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여전히 핵·경제 병진정책으로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8년 12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주변 강대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기도 마련했음.

- 또한 독일 국민 방문은 박 대통령에게는 통독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통일 대박' 구상을 구체화함으로써 통일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
- 특히 옛 동독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 드레스덴에서 남북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의미있는 큰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당간부·돈주, 아파트보다 단층집 선호...맞거래 현상도"(데일리NK, 3.24)

 - 최근 북한 내 간부들과 돈주(신용 부유층)들 사이에서 '땅'에 대한 소유 개념이 확산되면서 아파트보다 단층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아파트는 '권력과 명예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에는 주택부지를 많이 보유한 단층집을 암묵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비싸게 되팔 수 있어 인기가 치솟고 고급 아파트와 싼 단층집을 맞교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소식통은 이어 "중산층에서는 아직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돈주나 간부들은 단층집으로 옮기려는 붐이 일고 있다"면서 "텃밭이라는 구실로 주택 주변에 평균 60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집 울타리를 치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부지가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장마당 주변 단층집 한 칸짜리는 5000달러, 역전 부근에 골조만 되어 있는 아파트 집 한 채는 2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단층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는 간부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주택 건설업자들만 이익을 취하고 있음.
 -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쌀도 구하지 못해 굶고 있는 판에 자기 집이나 짓고 있다"면서 "개인들 노력을 쓰면 일공(하루 품삯) 값이 쌀 한 키로(kg)인데, 점심 한 끼 주는 것으로 공장 노력을 쓰는 것은 너무하고 양심도 없다"고 전함.
- 北유엔차석대사 "美핵위협 계속되면 핵억제력 구사"(연합뉴스, 3.25)

 -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24일(현지시간) 낮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을 악으로 규정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지목해 거듭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음.
 - 또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터무니없는 인권 소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관련 주장은) 모두 세뇌에 의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함.
- 北통신 "미국의 인권소동 파탄 면치 못해"(연합뉴스, 3.25)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발표한 '보도'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을 강하게 비



난함.

- 중앙통신은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그 무슨 '조선인권조사위원회'가 '조선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여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들며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함.
- 이어 "이것은 명백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현의 새로운 침략방식으로서의 '인권' 소동이며 현대판 전쟁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음.
- 중앙통신은 "미국의 정책 작성자들은 약동하는 기백으로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 도전이 워싱턴의 심장에 시한탄을 박는 자멸적 행위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인권모략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임.

● 북, 국경 통제구역 설정(자유아시아방송, 3.25)

- 북한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새로이 주민통제 구역을 설정해 통제구역 내에 있는 살림집들을 모두 철거할 예정인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함.
- 함경북도 한 소식통은 북한이 "오는 4월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연선 주변 300m 이내에 있는 살림집들을 모두 철거"하며, 이를 위해 이미 3월 초부터 연선 주변 300m 이내에 있는 가정세대들에서 '입사중'을 모두 회수해 갔다고 설명함.
- 국경연선 300m 이내의 살림집들을 허물려는 것은 그곳에 잔디밭을 조성해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는 의도로 보임.
-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당국이 국경연선 살림집들을 모두 허물고 그 곳에 잔디밭을 만들면 밀수와 도강(탈북)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걸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지시는 지난 2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내린 것이라고 강조함.
-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지시가 제대로 먹혀들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소식통들은 전망했음.

● FAO, 북 구제역 '질병 통제' 지원 결정(자유아시아방송, 3.25)

-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 당국의 구제역 지원 요청에 따라 피해 지역을 실사한 후 24일 돌아와 북한에 질병 통제 지원을 하도록 결정함.
-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구제역 방역과 퇴치를 위해 '기술 협력 사업'(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project)을 진행한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모금 규모와 지원 내용을 아직 밝히기는 힘들다고 밝힘.
- 현재 실사팀이 가져온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제역 상황 실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이는 일단 북한의 농무부(Ministry of Agriculture)와 상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 제네바 주재 北 대사, 美 적대 정책 비난(뉴시스, 3.26)

-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25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반인륜 범죄 조사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적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서 대사는 미국은 핵 협상과 인권기록까지 모든 것에 대한 북한의 평판과 관계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질수록 더 의도적으로 한반도 상황이 전쟁 직전으로 가게 된다고 경고함.

● 북한, 유엔에 인권 보고서 제출... '인권 증진' 주장(미국의 소리, 3.26)

- 북한이 오는 5월 1일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에서 지난 4년 동안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음.
- 먼저 북한은 법과 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히면서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 노동보호법 등을 제정했고, 형법과 공중위생법, 저작권법 등을 개정했다고 소개함.
- 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장애인권리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힘.
- 북한은 구체적인 인권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사형이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생명권과 자유권이 존중되고 있고, 법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주민들이 불만이나 청원을 제기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함.
- 또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부문에서도 건강권과 교육권, 주택권, 문화생활권, 식량권 등이 크게 개선됐으며,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특정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고, 지난 4년 동안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주장했음.
- 이와 함께 유엔이 매년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대해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라며 전적으로 배격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이와는 반대로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있음.
-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앞두고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음.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된 인권단체들의 문건에 따르면 국제인권연맹은 북한에서 여전히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으며, 중범죄자가 아닌 사람과 취약계층에게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기독교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는 가장 지독한 인권 유린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의 민간단체인 '성공



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수용소 내에서 기아가 수감자들에 대한 통제와 고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 '휴먼 라이즈 워치'는 북한에서는 아직도 정부가 발행한 허가증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형사적 범죄로 규정된다고 지적했음.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김정은 정권이 2011년 말 집권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발표했다고 전했으며, '북조선난민 구호기금'은 북한에 의한 외국인 강제납치 문제에도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음.

● 북, 탈북자 송금 도운 중국 상인 추방(자유아시아방송, 3.26)

- 최근 북한에 나가 장사하던 중국 상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나, 탈북자의 송금을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안서가 재산을 빼앗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함경북도 무산군에 나가 장사하던 중국 조선족 이 모 씨가 갑자기 중국으로 추방된 소식을 전한 함경북도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 한 씨는 "짐을 빼앗긴 이 씨가 억울해하자, 보안서는 공화국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재산을 몰수한다"고 통고했고, 추방령까지 내렸다"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이 씨는 북한에서 약초 등을 수집해 중국에 팔았고, 또 그의 아내는 남편이 요구하는 중국 물건을 북한에 떼어 보내 보따리 장사를 해서 1년에 10만 위안(2만 달러) 정도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 씨의 장사를 눈여겨 감시하던 보안서가 달려들어 "탈북자의 돈을 중간에서 전달해준다"는 죄목을 씌워 재산을 전부 몰수했으며, 실제로도 이 씨는 탈북자 가족에게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음.
- 하지만, 함경북도 주민들은 "보안서가 이 씨의 송금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재산을 크게 불릴 때까지 잡지 않고 기다렸다"면서 "이 씨가 집과 재산을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말함.
- 최근 회령시 일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중국 상인 추방사례가 꼬리를 물면서 북한 단속기관이 대북송금 브로커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북한 단속 기관이 중국 조선족이나 탈북자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꼬투리를 잡아 몰수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음.

● 북한 평양 순안 지역에 구제역 추가 발병(미국의 소리, 3.26)

-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북한 평양 외곽에서 돼지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북한 당국이 두 달이 훨씬 지나서야 보고했다고 밝힘.
- 북한은 리경근 농업성 수의방역국장 명의로 지난 24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발생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 기구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역시 앞서와 같은 O형이며 평양 외곽 순안 지역에서 지난 1월 16일 발생함.



- 발생 지역 내 사육 돼지는 729마리로, 이 가운데 6마리가 실제 감염이 확인돼 모두 살처분되었음.
 -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들을 격리하고 발병 지역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음.
- **"北, 中친척방문자 이혼청구 10년으로 연장·관리·감시 차원"(데일리NK, 3.26)**
- 북한 당국이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 친척방문차 나온 사사(私事)여행자의 미(未)귀국 사례가 늘어나자 이들의 이혼재판(청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짐.
 - 보통 일반 주민의 이혼재판 기간은 3년으로 사사여행자들의 이혼재판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들을 관리·감시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도로 보임.
 - 사사여행자들을 3년 만에 이혼을 승인하게 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의 연계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해 미귀환한 사사여행자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됨.
 - 북한 당국은 사사여행자의 귀국 포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가족동반을 하지 못하도록 취하고 있음.
 - 사사여행자가 미귀환 시 가족들은 연좌제로 입당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혼할 경우 연좌제는 물론 장래에 불이익을 당할 요소가 감소되기 때문에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 중임.
 - 소식통은 "사사여행 나간 엄마 때문에 아들이 대학에 못 가게 된 가정이 있다"면서 "이혼하기로 가족 합의하고 재판소에 가니 보위지도원 승인을 받아오라고 해 보위부에 갔더니 승인을 해주지 않아 아직까지 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전함.
 - 그는 "그래도 이혼을 한 가정은 다행"이라면서 "이혼하지 못한 주민들의 자식들은 대학에는 가지 못 하고 돈을 써야 겨우 재정부기학교(2년제) 정도에 간다"고 덧붙임.
- **北 "美 전쟁책동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된서리"(연합뉴스, 3.27)**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은 27일 '비망록'을 통해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북한을 '악(惡)'으로 표현한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 등을 열거하고 미국이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적대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함.
- **북, '인민재판' 통해 주민 처벌(자유아시아방송, 3.27)**
-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접경 도시들에서 주민총회라고 불리는 '인민재판'을 강행하고 있으며, 일부 미성년자들도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3월 16일, 회령시 공설운동장에서 주민총회가



- 있었다"고 밝힘.
- 함경북도 검찰소가 주도한 이날 주민총회에는 각 인민반장들이 책임을 지고 불량청소년, 밀수, 마약, 도박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주민들과 세대주반장, 위생반장들이 참가했으며, 모두 32명의 회령시 주민들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그중 살인혐의를 받은 주민 한명에게는 사형이, 불법휴대전화 소지자 6명과 불법영상물 보유자 9명은 각각 2년에서 5년까지의 교화(교도소) 형이 판결됐으며 기타 주민들은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음.
 - 또 다른 함경북도의 소식통에 따르면 불법휴대전화 소유자 6명은 지난 2월 중순 인민보안부 정치대학 검열대에 적발된 주민들이며 '노동단련대' 형을 받은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불법영상물을 몰래 빌려다 본 주민들임.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3월 18일 양강도 혜산시 공설운동장에서도 주민총회가 있었다"며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모두 11명의 주민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들 중 4명은 14살부터 17살 정도의 미성년자들 이었다"고 전함.
 - 마약복용 혐의로 재판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이날 재판에서 '소년교양소' 2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나머지 주민 7명은 불법영상물 보유혐의로 최고 6년까지의 노동교화소 형을 받았음.
 - 북한은 1980년대 중반 미성년자들을 구금하던 '소년교화소'를 해체했는데 최근 소년범죄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2011년부터 '소년교양소'라는 이름으로 다시 미성년자 교화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 다른 양강도의 소식통도 "3월 중순, 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소재지들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불법영상물 소지자들과 마약상습범들을 인민재판으로 처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북, 포스터 대의원 선거가 '서거'로(자유아시아방송, 3.27)
- 북한이 얼마 전에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성과적으로 치렀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면에는 선거장의 포스터(선전화)가 뜯어져 나가고, 선전판 내용에 교묘하게 낙서하는 사건이 발생해 보안당국이 발각 뒤집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함경북도 국경지방에 여행 나온 남포시의 한 주민은 "함흥시내 대의원 선거구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사진을 뜯어서 뭉개놓은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고, 또 일부 투표소에서는 선전화 내용을 묘하게 낙서해놓아 보위부와 보안서에서 발각 뒤집기도 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선전화에 누군가가 선자의 '니'자를 칼로 도려내고 거기에 종이를 붙여놓아 '서거'로 만들었다"면서 "구호 내용이 사망을 뜻하는 부고판으로 변해 조롱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 한편, 함경남도 김책시에서 국경일대로 여행 나온 또 다른 주민 소식통은 자기가 속한 선거구에서는 투표자 수십 명이 빠져 선거가 예정 시간



보다 1시간 늦게 마무리 되는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함.

- 북한에서 유권자들은 선거구에 표기된 명단대로 순서대로 나가 투표를 해야 하지만, 투표자들이 1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자, 관계 당국은 투표를 멈추고 찾으러 다니는 소동까지 벌였고, 결국 나타나지 않자 명단에서 빼고 투표를 강행했다고 증언함.
- 이 주민은 이렇게 선거 당일에도 집을 비운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면 투표율이 99.97%라고 주장한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심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의혹을 표시했음.

● 유엔 '북한 구제역 확산...DMZ 인근 소 발병'(미국의 소리, 3.28)

- 식량농업기구(FAO)는 26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제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의 최근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평양의 돼지농장에서 올해 초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 강원도의 소 농가로까지 번졌다고 밝힘.
- 조사단은 북한 수의당국의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돼지들에 구제역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 강원도 남부의 농가 두 곳에서 소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함.
- 조사단의 일원으로 방북했던 캐롤린 베니그노 씨는 북한 당국이 돼지 구제역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소 협동농장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소 네 마리를 확인했다고 말했음.
- 북한의 요청으로 파견된 전문가들은 일주일 남짓 평양 인근 돼지농장과 평양 시장, 소 협동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현황을 살펴봤으며, 현지 관계자들에게 농장 소독과 질병 확산 방지책 등 질병통제 방법을 전달함.
- 식량농업기구는 가까운 시일 안에 감염검사와 방지책 등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장 내 안전과 관련 장비 사용법, 동물 관리와 표본채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음.
-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 강원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원과 화천 등 접경지역의 축산 농가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함.

● FAO "북 식량부족 개선"(자유아시아방송, 3.28)

-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식량농업기구(FAO)의 아시아 대표가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힘.
-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북한을 방문했던 식량농업기구 아시아 지역 히로유키 코누마 대표는 아시아 사무소가 있는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연 재해의 변수가 있지만 북한의 올해 농산물 생산이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전망함.
- 작황 증가로 부족한 식량을 외국에서 충당하는 북한의 곡물 수입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소개했는데, 지난해 북한의 쌀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11% 증가했고 옥수수과 밀, 콩, 감자 등을 포함한 전체 곡물의 생산량도 4% 늘어서 곡물 수입량이 크게 줄었다고 전망.



- 쌀 수확량 증가율이 1년 만에 두 자리 수로 높아진 데는 '평양49'나 '평양 52'로 불리는 병충해에 강한 기능성 쌀종자의 개발과 비료 수급 개선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음.
- 그러나, 북한의 곡물 수확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우려함.

● 북 돌격대 모집 반타작도 힘든 이유(자유아시아방송, 3.28)

-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수도건설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만큼 수도건설에 필요한 돌격대 인력을 뽑느라 나섰지만, 지방에는 청년돌격대 인원수가 크게 모자라 애를 먹고 있음.
- 황해북도 청년동맹 사정에 밝은 한 주민은 "올해 고급중학교 졸업자 가운데 돌격대 입대자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지방에서는 예정 인원의 40%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힘.
- 보안상 해당 지역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이 주민은 돌격대 입대 예정자가 크게 줄어든 원인은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출생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그는 "고급 중학교에서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인민군대 초모가 끝나야 돌격대 입대 예정자를 알 수 있는데, 초모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 판에 돌격대 보낼 인원까지 있겠느냐며 우는 소리를 한다"고 설명했음.
- 지난해에도 북한 당국은 군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학생들 가운데서 뽑느라 돌격대 입대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락이 닿은 양강도 지방의 또 다른 대학생도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도 6.18돌격대가 맡아서 하는 데, 댐공사를 순수 손으로 10년 넘게 건설하고 있다"면서 "배가 고과 일부 돌격대원들이 다 탈영하는 바람에 중대가 해산된 곳도 있다"고 말함.
- 그는 북한 당국이 노동당 입당 뿐트(할당률)를 높이는 등 청년 돌격대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요즘 웬만한 젊은이들은 입당에 별 관심이 없다며 사회보장을 받고 장사하는 데 더 관심 있다고 덧붙임.

● 북 주민, 일본과 교역재개에 기대감(자유아시아방송, 3.28)

- 북한과 일본의 회담재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북한주민들 속에서 일본과의 교역이 금방 재개될 것처럼 성급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무역을 하는 함경북도의 한 화교 소식통은 "최근 조선에 일본 상품이 곧 대량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산 상품구입을 보류하고 일본상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또 "만경봉호가 다시 일본과 조선을 오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간 수출길이 막혔던 수산물도 다시 일본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면서 "이런 소문대로라면 금방이라도 일본과 교류 및



통상을 재개하게 될 것 같은 분위기"라고 주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설명했음.

- 소식통은 이어서 "이 같은 소문이 주민들 속에서만 떠돌면 믿기 어렵겠는데 당 간부들조차 이런 얘기에 끼어들고 있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함.
- 이 같은 북·일 회담과 관련된 소문은 청진, 함흥, 원산 등 과거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에서 주로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일 간에 진행되고 있는 회담 소식이 주민들 간에 입소문을 타고 퍼지는 과정에서 부풀려지고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과장된 얘기지만 전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북한처지에서 일본과의 교류재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풀이했음.

● 정부 "북한 구제역 지원 관련 대북제의 검토 안해"(데일리NK, 3.28)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내 구제역 (방역) 지원 실무 협의를 위해 우리가 추가로 대북 제의를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제역 실무접촉 관련해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함.

● 북한서 유행하는 은어에 담긴 민심(자유아시아방송, 3.28)

- 현지 소식통들은 북한 내부에서 최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둘째며느리'라고 비유하는 유행어가 생겼으며 간부들 속에서 더 많이 돌고 있다고 밝힘.
- 연락이 닿은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중간급 간부들 속에서 김정은은 '둘째며느리'로 불린다"며 "흔히 '둘째 며느리의 명령', '둘째 며느리의 지시'라는 식으로 김정은의 이름을 비유해서 부르고 있다"고 언급함.
- 이는 둘째 며느리를 맞아보야 첫째 며느리의 정을 안다는 속담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첫째 며느리'에 비유하며 김정은 제1비서를 '둘째 며느리'로 부른다는 의미임.
- 양강도의 소식통도 "사람들이 김정은과 김정일을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 아니겠느냐?"면서 "한마디로 일반주민 가정에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함.
- 그러나 그는 일반 주민들도 아닌 중간급이나 말단 간부들이 김정은 제1비서를 '둘째 며느리'로 부르는 데는 상당한 불만도 내포돼 있다고 강조함.
- 중간급이나 말단 간부들은 밀수꾼이나 마약사범과 같은 범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김정은 제1비서의 철저한 주민통제로 사회적 범죄가 크게 줄면서 중간급, 특히는 사법간부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짐.



2. 북한인권

● **朴대통령, 北인권 관련 中거부권 행사 자제요청 왜(연합뉴스, 3.24)**

-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행한 네덜란드 NO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혹시 중국 측이 북한의 인권관련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에 대해 대통령은 실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북한 인권 부분에 있어 더 임팩트가 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한 것으로 23일(현지시간) 확인됨.
- 비록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을 띠었지만 최근 한중 양국, 특히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쌓아온 우호적 관계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발언이었음.

● **北인권 · 김정은 '유엔특별법정' 회부 방안 '급부상'(연합뉴스, 3.24)**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권고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유엔 특별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엔의 한 소식통은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반(反)인권 관련자들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힘.
- 특히 이 소식통은 특별법정 설치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의결 없이 유엔 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할 수 있어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은 두 가지 안을 제시했던 인권보고서와 달리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여한 인사를 '적절한 국제형사사법메커니즘'에 회부하라"고 수정해 권고했음.
- 결의안이 오는 28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돼 본부로 넘어오면 유엔은 특별법정 설치 등 이행방안을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임.

●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연합뉴스, 3.24)**

- 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사법체제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 인권 결의안 제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으며 결의안의 일부 표현을 놓고 막판 수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결의안은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주 후반(27~28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II. 의회 사상 첫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미주중앙일보, 3.24)**
 - 일리노이주 상·하원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모두 채택해 최초로 주의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
 - 일리노이 상원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지난 4일 아이리스 마르티네즈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결의안이 21일 회의를 열고 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SR0969)을 채택했음.
 - 이에 앞서 주 하원은 2013년 11월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HR0700)을 지난달 27일 채택한 바 있음.
 - 주의회 결의안은 법안과 달리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아 상하원 통과로 최종 통과가 결정됨.
 - 이번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고발하고 미국 정부가 탈북자 처리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국무부 장관, 일리노이 연방하원 및 인권위원회에 결의안을 전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인권위 "북한인권법 주무기관 인권위로 해야"(연합뉴스, 3.25)**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인권법과 민생법으로 분리하고 각각 인권위와 통일부를 주무기관으로 해 조속히 입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인권위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인권위의 업무라고 지적하며 "통일부를 북한 인권의 주무기관으로 하는 것은 이런 법령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 이어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내정 간섭이라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남북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가 북한 인권 업무를 담당하면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미 의회, 북 인권 고발 청문회 개최(자유아시아방송, 3.26)**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6일 '포악한 북한 전제정치의 충격적인 진실(The Shocking Truth about North Korean Tyranny)'을 주제로 북한 인권을 고발하는 청문회를 개최함.
 -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김정은 정권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한 주민이 인권을 박탈당한 채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
 - 청문회를 주재한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스티브 쉐벗(Steve Chabot) 의원도 국제사회가 이와 같은 가공할 만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애써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 **김문수 지사, 美 싱크탱크에서 '북한인권' 관심 촉구(뉴시스, 3.26)**
 -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찾아 북한 인권 강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 김 지사는 "인권은 북한과 중국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를 외면한다면 인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함.
 - 또 "미국이 동북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에는 군사적 요인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을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말함.

- **앰네스티 '북한, 지난해 최소 70건 사형 집행'(미국의 소리, 3.27)**
 -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7일 연례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를 발표하고, 믿을만한 보고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해 적어도 7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하며, 하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 보고서는 특히 다수의 공개 처형이 이뤄졌고, 장성택을 포함해 지도자 김정운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는 기록도 있다고 지적했음.
 - 이어 북한에서 살인과 인육 취식, 횡령, 음란물, 중국으로 탈북하는 도강죄, 부정부패, 노동당 규약에 위배되는 활동, 한국 비디오 시청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으나, 정보들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식 집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유엔 COI 권고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토론회(코나스넷, 3.27)**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인권포럼, 북한민주화위원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개최
 - 이날 행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COI의 유엔 권고에 대해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루어 졌음.
 - 발표에 앞서 인권위는 COI의 한국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의 필요성을 전제하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

- **"중, COI 권고 무시는 국제적 망신(자유아시아방송, 3.27)**
 -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이날 마련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내용을 짚어보고 토론하는 행사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진 프랭크 자누지 국제앰네스티(AI) 워싱턴사무소장은 "유엔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채택을 중국이 반대할 경



우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언급함.

- 자누지 소장은 "중국의 입장과 상관없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대한 유엔안보리 채택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또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 외에, 유엔총회가 임시특별법정(Ad Hoc Tribunals)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음.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연합뉴스, 3.28)

- 유엔 인권이사회는 28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해 국제 사법 메커니즘에 회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
-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일본 등 서방측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30, 반대 6, 기권 11표로 채택함.
-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 쿠바,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6개국임.
-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 대해 반인도적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COI 보고서 권고의 이행을 통해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반인도범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안보리가 국제사법 메커니즘에 넘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 아울러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COI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산하에 현장 기반의 조직(Field Based Structure)을 설치하라고 요청함.
- OHCHR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각종 증거를 생산·보존하게 될 현장 기반 조직을 태국이나 한국에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결의안은 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COI 권고사항 이행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美의회 北제재강화 법안에 反인권 범죄 첫 포함(동아일보, 3.29)

- 미국 의회가 5월 하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북한제재강화법안(HR1771)에 반(反)인권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확산과 관련이 없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김씨 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보안 기관들의 해외 외화벌이 수입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



은 것임.

- 2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안 초안 13쪽에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WMD) 확산, 불법 행위, 무기 거래, 사치품 수입, 심각한 인권 남용, 현금 위조, 북한 정권에 의한 검열"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2쪽은 '심각한 인권 남용의 유형을 "대량학살, 노예 착취, 유괴, 살인, 성적 착취"로 적시했음.

● 北-美,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 현장서 '기싸움'(연합뉴스, 3.29)

- 북한인권결의안을 놓고 2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북한과 상대국 간에 팽팽한 '기 싸움'이 연출됨.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당신들 일이나 신경쓰라"며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 이날 회의장에서 폴라 슈리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의 발언에 세 차례 끼어들면서 다른 나라를 비판하기보다 자국을 향한 의혹에 답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 그러나 서 대사는 "우리 말에 '자기 일이나 신경쓰라'(mind your own business)는 말이 있다"고 응대하면서 "다른 이들에 대해 말하기 전에 자기 얼굴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함.
-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 "그들도 과거에 전쟁범죄와 반(反)인도 범죄, 대량학살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감추려 한다"고 비난함.
- 또한 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의 바탕이 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읽었느냐는 로이터 통신의 질문에는 문서를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듯한 손동작을 하며 '다 지난 일'(passed away)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3. 탈북자

● 유럽탈북자들, 헤이그서 '북 인권' 시위(자유아시아방송, 3.24)

- 영국, 네덜란드 등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일부터 이틀 간 북한 인권 사진전과 북핵 반대 시위를 개최함.
-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해외 탈북민 단체의 연합체인 '국제탈북민연대'는 네덜란드 헤이그 국회광장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북핵 반대와 북한의 인권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임.
- '국제탈북민연대'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고통 받는 주



민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자들과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행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 25일에는 네덜란드 탈북자 단체가 북한의 핵실험에 사용된 자금 통계와 주민의 생활고에 관해 발표하고, 김정은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고발하는 고발장 등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각 언론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함.

● **중견 탈북기업인 H씨 '잠적'...'투자탈북자 피해우려'** (연합뉴스, 3.26)

- 탈북자들로부터 주로 투자금을 모아 '기업신화'를 일궈낸 것으로 알려진 중견 탈북기업인 H(49)씨가 최근 중국 출장 중 사라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26일 경기도 파주에 공장을 둔 H무역 관계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여직원 3명과 함께 중국 출장을 갔다가 귀국 예정일인 22일 중국 선양(瀋陽)의 한 호텔에서 지취를 감춤.
- 동행한 직원들은 중국 공안과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실종 신고를 하고 이틀 뒤 귀국했음.
- H씨는 탈북자들에게 이자를 주기로 하고 투자금을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H무역에 투자한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는 H씨가 단순 실종된 것이 아니라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한 탈북자단체 관계자는 "H무역에 투자한 탈북자 투자자만 410여 명, 투자 원금만 1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H씨는 이번에 중국 출장 가기 전날까지도 탈북자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전했다.
- H씨는 탈북자들의 투자금 외에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에 있는 공장 부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200여억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총 400여억 원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에서도 H씨의 잠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짐.
- H무역 직원 11명은 이날 오전 H씨를 사기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고소장에서 H씨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수익금 15%를 주겠다고 직원 11명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3천530만원을 빌려 도피했다고 밝힘.
- 통일부 관계자는 "이 회사가 탈북자를 고용해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아왔다"며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 함경북도 출신인 H씨는 탄광에서 일하다 북한을 탈출, 2002년 국내에 들어와 2003년 5월 자본금 1천500만 원으로 생필품 등을 수출하는 H무역을 설립했고 직원도 대부분 탈북자로 채용했음.

● **잠적說 탈북자 사업가, 국군포로에도 투자 집중 권유**(연합뉴스, 3.27)

- 한 탈북자 출신 사업가가 탈북자들로부터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중국으로 달아났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 사업가가 귀환 국군포로들에게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확인됨.



- 귀환한 국군포로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고 이들이 정부로부터 평균 5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점을 노렸던 것으로 보임.
 - 유영복(84) 귀환국군용사회 회장을 비롯한 국군포로 10명은 이날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에 H무역의 대표 한모(49) 씨와 이 회사 직원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음.
 -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이 H무역에 투자한 총 금액은 20억여 원이며, 이들 외에도 H무역에 투자한 국군포로와 가족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군포로들은 "우리와 같은 국군포로의 자녀가 H무역의 투자모집인들을 소개해주 이들을 믿고 쉽게 돈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설명함.
- **남북하나재단, 탈북대학생을 통일시대 인재로 키운다(데일리NK, 3.27)**
- 남북하나재단과 사단법인 창조와혁신은 27일 서울 그랜드 앰배서도 호텔에서 탈북대학생 관련 멘토링 업무협약(MOU)을 체결
 - 이번 MOU는 탈북대학생들의 학업지원과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로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착한(着韓)' 협업모델을 만들기 위한 재단의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됨.
 - 재단과 창조와혁신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인성, 기업경영, 문화예술 등 분야별 특강 ▲일대일 및 그룹 멘토링 ▲예비 사회인 교육 ▲역사·문화체험 등을 진행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임.
 -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이번 착한 멘토링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70%가 넘는 20~40대 청장년층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에 잘 적응해서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뿌리내리는 '착근(着根)'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강조함.

4. 이산가족

- **아베, 서툰 한국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연합뉴스, 3.26)**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3자의 단결된 협력을 통해 북한이 핵이라든지 미사일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또 한국의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긍정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현병철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의 문제"(코나스넷, 3.28)**
- 28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주최한 '이산가족의 인권법상 가족권 보호'제하 정책세미나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인권위는 이산가족 문제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함께 우리 국가가 신속히 해결해야할 3대 인권현안으로 간주하며 관련부처에 책무이행을 강조하



고 있다"라고 밝힘.

- 이어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인권법으로 적용해 인권적 차원으로 새롭게 접근해 보려는 움직임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 위원장은 세계인권선언과 인권 관련 국제규약을 들면서 이산가족의 문제는 가족권이라는 '인권'개념의 문제임을 강조했다며,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이 되며 따라서, 천부적 인권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가족권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 북한 인권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한 국제인권 규약을 부정하거나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북한이라는 존재"라며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지적함.
- 국제인권 메카니즘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 인권이사회를 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다루기 위한 '특별절차'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마르주키 다루스만)'과 실향민 문제를 전담하는 '국내 실향민 인권 특별보고관(찰로카 베아미)'이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음.

● 정부 "北, 대통령 제안에 긍정적 호응 기대"(연합뉴스, 3.28)

-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과 관련한 설명자료에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이산가족 문제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독일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 박대통령 '드레스덴 선언'...대북 3대제안 발표(연합뉴스, 3.30)

- 독일을 국민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통독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함.
- 박 대통령은 이날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음.
- 박 대통령은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에 대해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다시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 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면서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



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치겠다"고 제안했음.

5. 남북자

- **일본인 과반 "한·중과 관계개선 서두를 필요 없어"(연합뉴스, 3.24)**
 - 니혼게이지이신문(닛케이)이 21~23일 실시해 24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남북자 문제가 걸린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대화'에 의한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답이 62%로, '경제 제재 등으로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28%)는 답을 크게 상회함.

- **메구미 부모 "일본 정부, 북한 변화 기회 잡아야"(미국의 소리, 3.25)**
 - 일본인 남북자 요코다 메구미 씨의 아버지 시게루 씨와 어머니 사키에 씨가 24일 도쿄의 외신기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손녀와의 첫 상봉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일본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읽고 납치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 요카다 씨 부부는 메구미의 생존을 확신하고 있음을 은경 씨에게 직접 전했다고 말했으나, 메구미 씨의 안부에 대해서는 북한 측으로부터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밝힘.
 - 또한 외손녀와의 첫 상봉을 허락한 북한의 변화를 일본 정부가 잘 읽고 납치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가 대북 압력과 유인책을 균형 있게 활용해 납치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시게루 씨는 외손녀와의 몽골 상봉을 계기로 북-일간 교류가 깊어져 이번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며, 이달 말에 열리는 북-일 국장급 회담에 기대를 표명했음.

- **일본, 납치문제 진전 시 대북제재 해제 시사(연합뉴스, 3.28)**
 - 후루야 게이시(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면 대북 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 수 있다고 밝힘.
 - 후루야 납치 담당상은 30~31일의 북일 정부 간 공식 협상을 앞두고 이 같은 유연한 입장을 표명함.
 - 다만 이번 북일 정부 협상에서 납치문제의 재조사를 요구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조치를 해제할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음.
 - 교도통신은 일본이 북한과의 국장급 협상에서 납치 피해자의 안부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며 북한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우선 북한 국적 보유자들에게 대한 입국 제한조치의 부분적인 해제, 전세기 취항 금지조치 해제 등의 제재완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도함.



- 후루야 담당상은 제재 해제의 조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상에 달린 것"이라며 "우리의 기본 원칙은 '행동 대 행동'"이라고 밝혔다.
-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협상에서 "납치, 핵, 미사일 등의 모든 현안을 의제로 다루겠다"고 언급함.

● **美 "北미사일' 후속대응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의 중"(연합뉴스, 3.29)**

-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레브리핑에서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북·일 협상에 대해 "우리는 북한과 관련한 모든 이슈에 대해 동맹인 일본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함.

● **북일, 1년4개월만 정부 간 공식협상...'기싸움' 팽팽(연합뉴스, 3.30)**

- 북한과 일본이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1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정부 간 공식 협상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음.
- 양측은 31일까지로 예정된 정부간 국장급 협상에서 자국의 입장과 주장을 반복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은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논의했으나 아직도 공식 의제 도출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
- 회담에서 일본은 자국민 납북자 송환과 납치 문제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은 2006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이 시행 중인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은 대북 제재의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은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도 제기했을 것으로 관측됨.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독 NGO, 북한서 암소 사육장 운영(자유아시아방송, 3.24)**

- 북한에서 친환경 유기물 농법을 전수해온 유럽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 연구기관인 유기농연구소(FiBL/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의 독일 지국은 평양 근처 축산 농장에서 오는 8월부터 북



한에서 암소사육(축우) 시설을 세워 축산 관련 교육과 기술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힘.

-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국의 북한 지원 책임자인 루카스 바움가르트 연구원은 유기농연구소와 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할 시범농장에서 '가축 사육 생산성 향상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2012년부터 3년간 진행해 온 기술 지원사업인 '유기물을 이용한 곡물재배' 사업이 오는 7월에 종료되면 8월부터 시범 가축농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 평양 인근에 시범축사를 지어서 암소 16마리와 어린 암소 4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들이 먹이를 먹고, 자거나 이동하기에 알맞은 축사 구조를 지어서 적은 투자로 높은 생산성을 얻기 위한 공동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연구소 측은 새로운 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5만에서 약 10만 유로가 든다면 유럽연합 국제개발기금과 스위스개발협력청에 지원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함.

● 영 NGO, 북에 30만 불 상당 텐트 지원(자유아시아방송, 3.24)

- 영국의 민간단체 쉼터박스(ShelterBox)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북한 수재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천막이 포함된 구호상자 총 448개를 오는 4월 분배할 예정이다.
- 구호상자에는 담요, 깔개, 정수여과기와 물통, 톱, 삽 같은 연장과 생필품도 함께 포함돼 있음.
- 이번 지원으로 이 기구의 수해 지원은 완료되며, 쉼터 박스의 앤드루 에번스 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지난해 여름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북한 수재민 1천 2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나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사실상 지난해 11월경 분배될 예정이었던 텐트들이 세관 통관이 오래 걸려 지연됐다면서 마침내 분배 준비 절차가 다 완료됐다고 전했으나, 세관 통관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음.
- 이번 지원은 영국을 포함해 유럽의 많은 국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 받은 미화 30만 달러로 이루어졌음.
- 동 단체는 이번에 기부된 모금으로 따로 휴대용 취사도구도 북한 수재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구호 상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과정 동안 직원들이 북한 수해지역에 직접 가 분배 감사를 할 계획임.

● WFP "스위스 지원 분유 4백 톤, 이달 초 북한 도착"(미국의 소리, 3.26)

- 스위스 정부가 지원한 230만 달러어치 상당의 분유 400t이 3월 초 북한에 도착해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품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WFP)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2월 말 도착 예정이었던 분유가 조금 늦어져 지난 3일 남포항에 도착해 북한에서 운영하



는 영양과자 공장 두 곳과 '수퍼 시리얼'로 불리는 '혼합가공식품' 공장에 보내져 영양식품을 만드는데 쓰이고 있다고 설명

- 한편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은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미화 8백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토머스 피슬러(Thomas Fisler)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장이 밝힘.
- 이 중 380만 달러는 600t의 분유 구입에 투입됐으며, 지난 14일 선적되어 오는 5월 북한에 도착 예정이며, 나머지 420만 달러는 북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을 전수하고 산림농법을 전수하는데 사용될 계획임.

● 미 선교단 "북 모든 중고교 축구공 지원"(자유아시아방송, 3.26)

- 미국 협동침례교단(CBF) 산하 국제선교단이 앞으로 3년간 북한의 초·중·고급 중학교에 약 2만 6천 개의 통일축구공을 보내고, 스포츠를 통한 교류 확대를 위해 올해 가을 북한에서 미국에 사는 한인축구단이 참가하는 통일축구대회를 열겠다고 밝힘.
- 국제선교단 소속 윤유중 목사는 강원도 지역 어린이들에게 3년째 '통일 축구공'을 보냈다면 어린이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 지원 대상을 북한의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또한 오는 9월 스포츠를 통한 미국과 북한의 교류확대를 위해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로 구성된 축구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원산시 축구대표 또는 강원인민병원 축구단과의 친선 통일 축구대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윤 목사는 오는 6월 강원도 원산의 애육원에 대형 냉장고 3대와 식량을 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면 통일 축구대회와 축구공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WHO, 최첨단 결핵진단 시스템 북한 보급 확대(미국의 소리, 3.27)

-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결핵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인 진엑스퍼트(GeneXpert)의 보급을 지방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공개한 '2014 결핵 보고서'에서 진엑스퍼트가 지난 해 평양의 국립결핵표준연구소에 처음 보급된 사실을 전하면서 보급 확대 계획을 덧붙였다.
- '진엑스퍼트'는 결핵 검사 뒤 2시간 안에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최첨단 장비로, 결핵 발병 여부를 모르는 환자나 다제내성 결핵,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인 에이즈 바이러스 관련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진단할 때 사용됨.
-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진엑스퍼트' 보급 확대 외에 북한에서 결핵 감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7개 다제내성 결핵 치료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임.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북한 내 결핵 발병자는 인구 10만 명 당 409 명으로, 환자 수에 비해 치료시설과 장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8. 북한동향

- 北 「중앙통신 보도(3.25)」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3.17) 관련 "이것은 명백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현의 새로운 침략방식으로서의 인권소동이며 현대판 전쟁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미국 강경 비난(3.25, 중앙통신)
 - △ 《인권보호》 - 새로운 전쟁간판, △대조선 압살정책의 2대기 등의 하나- 《인권》, △국권은 민족의 생명이다.
 - 미국은 《인권우위론》을 제창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국권유린, 정권전복 행위를 감행해 나가고 있으며, 《인권》공세의 주되는 화살은 북한에 돌려지고 있음.
 - 국권은 민족의 생명임. 미국의 대조선 인권모략 소동은 절대로 통할 수 없으며 반드시 파탄을 면치 못할 것임.
- 北 교육위원회 등 전국 각지 학교·유치원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새 학년도 준비사업 진행(3.27, 중앙방송)
- 조국통일연구원, '미국은 남북대화과 평화파괴의 원흉이며 남북관계 파국과 한반도 긴장 격화의 장본인'이라며 '미국의 범죄적 정체를 규탄'하는 비망록 발표(3.27,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국무부 대변인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3.9) 결과에 대한 발언(100%의 찬성투표 의심이 간다, 민주주의 모델이 아니다)을 거론하며 "선거문제를 걸고드는 미국의 비열한 대북 '인권 공세'는 우리(北) 인민의 반미감정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고 주장(3.27, 중앙통신·노동신문/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공세는 파탄을 면치 못한다)
- 中 지린성기록보관소의 '위안부' 강제동원 문건 공개를 연합뉴스 인용 보도하며 '일본의 성노예 범죄가 국가적 조치에 의해 감행되었다'고 비난(3.27, 중앙통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